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1호

발행일: 2023. 3. 10. (금)

제402회 국회(임시회, 2023. 1. 9. ~ 2023. 2. 1.)

제403회 국회(임시회, 2023. 2. 2. ~ 2023. 2. 28.)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 나.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 다. 콘텐츠산업 제도개선
- 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 1. 개관

제403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2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7일간 진행되었으며, 2월 27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 모두 98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제402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1월 9일 소집되었으며, 2023년 2월 1일까지 2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제403회 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표시 의무화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농촌특화지구’,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4)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제적 기술 경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6)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7) 소액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2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농어업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403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02회 국회의 2023년 1월 30일 본회의와 제403회 국회의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a href="#">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법제사법위원장
2		<a href="#">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법제사법위원장
3		<a href="#">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	정무위원회(20)	<a href="#">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5		<a href="#">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6		<a href="#">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7		<a href="#">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8		<a href="#">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9		<a href="#">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10		<a href="#">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11		<a href="#">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12		<a href="#">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희곤 의원 등 10인
13		<a href="#">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병욱 의원 등 11인
14		<a href="#">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a>	민형배 의원 등 14인
15		<a href="#">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용우 의원 등 12인
16		<a href="#">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오영환 의원 등 15인
17		<a href="#">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용우 의원 등 10인
18		<a href="#">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선교 의원 등 10인
19		<a href="#">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용우 의원 등 10인
20		<a h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선교 의원 등 10인
21		<a href="#">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a>	홍성국 의원 등 13인
22		<a href="#">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송석준 의원 등 15인
23		<a href="#">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오기형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4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6)	<a href="#">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25		<a href="#">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a>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26		<a href="#">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27		<a href="#">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필모 의원 등 11인
28		<a href="#">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필모 의원 등 11인
29		<a href="#">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조승래 의원 등 10인
30	외교통일위원회(9)	<a href="#">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외교통일위원장
31		<a href="#">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외교통일위원장
32		<a href="#">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정부
33		<a href="#">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34		<a href="#">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영호 의원 등 10인
35		<a href="#">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정부
36		<a href="#">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37		<a href="#">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상민 의원 등 10인
38		<a href="#">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재정 의원 등 10인
39		<a href="#">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0	행정안전위원회(9)	<a href="#">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1		<a href="#">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2		<a href="#">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3		<a href="#">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4		<a href="#">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5		<a href="#">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승수 의원 등 12인
46		<a href="#">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47		<a href="#">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4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1)	<a href="#">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9		<a href="#">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50		<a href="#">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51		<a href="#">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52		<a href="#">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53		<a href="#">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병훈 의원 등 10인
54		<a href="#">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상헌 의원 등 10인
55		<a href="#">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병훈 의원 등 12인
56		<a href="#">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임오경 의원 등 11인
57		<a href="#">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상헌 의원 등 13인
58		<a href="#">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59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6)	<a href="#">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60		<a href="#">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61		<a href="#">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6)	<a href="#">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63		<a href="#">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백종헌 의원 등 10인
64		<a href="#">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a>	위성곤 의원 등 23인
65		<a href="#">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66		<a href="#">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67		<a href="#">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68		<a href="#">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69		<a href="#">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성환 의원 외 168인
70		<a href="#">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태호 의원 등 10인
71		보건복지위원회(20)	<a href="#">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72	<a href="#">장애아동 복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73	<a href="#">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74	<a href="#">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75	<a href="#">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76	<a href="#">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77	<a href="#">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78	<a href="#">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79	<a href="#">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종성 의원 등 12인
80	<a href="#">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고민정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1	소관 상임위원회(건)	<a href="#">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종성 의원 등 10인	
82		<a href="#">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종성 의원 등 10인	
83		<a href="#">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서영석 의원 등 12인	
84		<a href="#">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조명희 의원 등 15인	
85		<a href="#">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원이 의원 등 10인	
86		<a href="#">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연숙 의원 등 10인	
87		<a href="#">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강선우 의원 등 11인	
88		<a href="#">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남인순 의원 등 14인	
89		<a href="#">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a>	인재근 의원 등 10인	
90		<a href="#">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백종헌 의원 등 10인	
91		<a href="#">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92		<a href="#">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93		<a href="#">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94		환경노동위원회(7)	<a href="#">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95			<a href="#">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	전용기 의원 등 12인
96			<a href="#">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주환 의원 등 11인
97			<a href="#">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98		국토교통위원회(4)	<a href="#">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99			<a href="#">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0		<a href="#">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101		<a href="#">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강준현 의원 등 10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산업 제도개선,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 개요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첨단기술의 무기화, 공급망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환경 육성 및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 href="#">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a>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고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이에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 NSF(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	2023-02-27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한 ‘경제안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음.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협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주요내용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특별법 제정)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등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기술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지원, 실험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 암호통신망, 위성항법 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쉼드(APIS) 신설 등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7. 11.)

## (1)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구축

### ①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및 실행력 확보 노력

- **(지정)** 국가 전략적 가치(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우리 기술경쟁력 등 고려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선정\***

\* (10대 전략기술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인공지능,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

- **(육성)** 분야별 기술목표·세부 중점기술(30~50개)을 포함하고,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맞춤형 육성·보호 로드맵** 마련('22.上)

- ▶ **(육성)** 도전적 R&D, 혁신조달, 실증 인프라 지원, 기업수요 R&D 지원 등
- ▶ **(보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 표준선점 지원, 연구보안과제 관리강화 등

- **(특별법 제정)** 공급망 안정화(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와 병행하여, 양자, 우주 등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특별법\*** 마련

\* 국가필수전략기술 컨트롤타워 구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체계 활용), 신속·과감한 연구개발 추진, 유연한 방식의 인력양성, 기반조성(특화연구소, 지역 혁신 허브 등)

### ②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DARPA\* 체제 도입

- **공공·안보**의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을 기획·관리하는 전담조직** 도입 추진('22.下)

\* 美 방위고등연구계획국 : 국가안보 등 위해 고난이도의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안: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과 특례 마련 등](#) 2022. 3.

[김영식 의원안: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과 특례 마련 등](#) 2022. 11.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우주·원자력·양자 등 집중 육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2. 30.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안보 자산(security assets) 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반드시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전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주요 이슈의 이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0. 17.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 패권 경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인 리스크(美· 중간 경쟁, 글로벌 수요 위축 등) 극복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다. 총 두 편 중 첫 번째 편인 본 글에서는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 급변의 의미를 우선 살펴본다.

### [과학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정체계의 정비 부처·법률 분산에 따른 유사·중복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6. 30.

과학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정한 과학기술분야를 지정하는 체계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양한 법률들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지정체계가 계속 추가되는 추세다. 지정체계의 핵심은 특정한 분야에 국가적 역할을 결집하는 것이지만, 지정체계가 늘어날수록 역할의 결집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정체계 정비를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나.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 개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데이터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날로 격화되는 데이터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국가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수요자 맞춤형 개방 확대, 민간·공공데이터 연계 활용 강화 등을 통해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우수 데이터 혁신기업 발굴·지원 등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

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개인정보 보호 기술 확보 등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p><u>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3-02-27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 과제목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 주요내용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추진  
전략

- (더 안전해지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 (더 편리해지는)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 (더 튼튼해지는)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



원칙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출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2023 정부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12. 28.)

## 비전

#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 3대 정책 방향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 5+1 핵심 추진 과제

- 1 전 국민 마이데이터시대 본격 개막
- 2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기반 강화
- 3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 4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 5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 +1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전면 혁신

## 추진 기반

개인정보 보호법 2차 전면 개정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정부제출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2021. 11.

[송갑석 의원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율](#) 2020. 11.

[김남국 의원안: 개인정보 분실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20. 11.

[허은아 의원안: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2020. 11.

[윤영찬 의원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 완화 등](#) 2021. 2.

[민병덕 의원안: 공익제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허용 등](#) 2021. 6.

[김병욱 의원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규정 정비 등](#) 2021. 4.

[박수영 의원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제한](#) 2021. 4.

[장철민 의원안: 정당한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 금지](#) 2021. 9.

[민형배 의원안 등: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과징금 체계 정비](#) 2021. 8.

[민형배 의원안: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등](#) 2021. 8.

[권명호 의원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기관 지정취소의 법률상 근거 마련](#) 2021. 8.

[백혜련 의원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2022. 5.

[한준호 의원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에 소재불명 추가](#) 2022. 9.

[이용우 의원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의무 신설](#) 2022. 9.

[오기형 의원안: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자료제출명령 신설 등](#) 2022. 9.

[양성숙 의원안: 개인정보취급자의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 금지](#) 2021. 11.

[추경호 의원안: 자율규제단체 및 자율규약 근거 마련 등](#) 2021. 2.

[‘이루다’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2. 15.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이용자와 나눈 일부 대화에서 차별·혐오적 표현이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윤리,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준수 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출시 20일 만에 중단되고 만 이루다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에 남긴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동의와 사후통제의 조화, 가명처리의 개선,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구체화, 적정 수준의 학습데이터 확보 등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12. 31.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의 각 측면에서 주요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 거래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10. 2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용정보법」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개선과제로 ①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② 이동 정보의 범위 명확화, ③ 점진적인 개인정보 이동권의 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공동세미나 2021. 4. 1.

주제발표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 설명

이성엽 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토론

이슈 1.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 (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 이슈 2.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 (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 이슈 3.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안 제35조의2)
- 이슈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 (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 이슈 5.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 이슈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 (안 제6조)
- 이슈 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안 제25조의2)
- 이슈 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 (안 제30조의2)
- 이슈 9.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 (안 제37조의2)
- 이슈 10.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  
 선지원 교수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손승우 교수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이지은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박소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윤주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원준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권영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다. 콘텐츠산업 제도개선

### 개요

정부는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K-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온라인, 국제성 등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자율 규제를 통해 산업의 발전과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 왔으나, 자율 규제 혹은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회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게임과 만화 산업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최근에 사행성 유도, 확률 조작 등이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웹툰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	2023-02-27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롤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청소년이 PC방에서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 바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p>	
2		<p><b><u>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b></p> <p>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웹툰 산업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나아가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p>	2023-02-27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 과제목표

한류 영향력 지속·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
- 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
- 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
- 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K-콘텐츠 매력 확산)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 2023 정부 업무보고(2023. 1. 5.)

#### ③ K-콘텐츠 장르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K-팝) 온라인 K-팝 공연을 통한 비대면·글로벌 확산(80억 원) 및 음악+신기술의 결합\*(82억 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 선점
  - \* 티켓 판매, 음원 거래, 작사·작곡, 팬클럽 등 기존 음악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
- (K-영화·드라마) 제작·체험·인력양성 기능 집약형 콘텐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으로 즉시 유통·확산되는 OTT 콘텐츠 집중 육성\*\*
  -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1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3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7월) 등 제도·규제 혁신
  - \* 특수영상 클러스터(~25년, 총 1,476억 원), 부산종합촬영소(23~25년, 총 660억 원) 등
  - \*\* OTT특화콘텐츠 제작지원(454억 원), 다국어자막·더빙·시각효과 등 후반작업 지원(300억 원) 등
- (K-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도입(90억 원 신규) 및 콘솔 등 전략 플랫폼 육성, 이스포츠 대회 확대(대통령배, 1회→2회)로 우수 선수 발굴
  - \* 세계 4위의 게임 강국, 수출액은 86.7억 달러, 콘텐츠 수출의 70%(21)로 수출견인 산업
- (K-웹툰·웹소설) 웹툰융합센터(23.6월 개소, 총 500억 원)를 통한 작가·기업 윈윈 지원, 10억뷰 작가 육성(10억 원) 및 저작권 보호 강화\*\*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
  - \* 재벌집 막내아들·웹소설→웹툰→드라마 등 콘텐츠가 흥행, 스토리 원천으로서 중요성 부각
  - \*\*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웹툰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수사 전문화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유정주 의원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신설](#) 2021. 2.
- [하태경 의원안: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등의 설치](#) 2022. 11.
- [유동수 의원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신설 및 “컴플리트 가차” 금지 등](#) 2021. 4.
- [조승래 의원안: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2021. 9.
- [김승수 의원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분야 추가](#) 2021. 6.
- [류호정 의원안: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2022. 3.
- [전용기 의원안: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 2022. 8.
- [전용기 의원안: 청소년의 정의 변경](#) 2022. 8.
- [전용기 의원안: 게임아이템등의 확률정보 공개 의무 신설](#) 2022. 3.
- [이상헌 의원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 등](#) 2022. 9.
- [김승원 의원안: PC방 영업자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2022. 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승수 의원안: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규정 등 신설](#) 2021. 6.
- [김예지 의원안: 웹툰의 법적 근거 신설 등](#) 2022. 3.
- [전용기 의원안: 웹툰의 법적 근거 신설 등](#) 2021. 9.
- [도종환 의원안: 웹툰의 정의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지원 우대](#) 2021. 4.

[글로벌 게임 정책 · 법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2022 만화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정부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2019. 8.

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 방식이라고 해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시정 요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정리해 본다. 본 연구는 자율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일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논의와 보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 10. 1.

본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배경과 논의를 확인해본다. 그리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행 자율 규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6. 10. 31.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2012년 법률 제11311호로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
- 만화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개요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2015. 12. 29.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개별 사업들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에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의료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p><u>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p> <p>현재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p>	2023-02-27 (수정가결)
2		<p><u>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u></p> <p>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p>	2023-02-27 (수정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 과제목표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주요내용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발달장애인) 최종종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2. 8. 19.)

### ③ 장애인 돌봄확대로 일상적 삶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시간·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량 감소가 있는 장애인·산정특례종료자와 양육부담이 큰 장애아 지원 강화

#### 【 장애인 돌봄 지원 】

- ① 활동지원: (단가)14,800원(+780원) (대상)107천명(+8천) (가산급여)4천명(+1천), 2천원(+5백)
- ② 장애인: △장기요양 전환시 활동지원 제공, △산정특례 종료시 3년 경과조치 + 제도개선 추진
- ③ 장애아: (대상)8천명(+4천명), (돌봄시간)연 840시간(+120시간), 중증은 소득초과 시(120%에도 60% 지원
- ④ 발달장애: (성인)1만명(+1천), 125시간(+25), (성인·청소년)단가 14,800원(+780)

- (자립)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경로 구축, 서비스 지원 시범실시(10개 지역 200명)
  - ※ '탈시설' 개념에 대한 학계·장애계 이견(시설 전면폐지 vs 시설유지)을 감안 시범사업 통해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자원 점검 및 단계적 접근 실시
- (건강·안전) 그간 마련한 장애인 건강·보건 인프라\*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확대 예방·대응 위한 권익옹호기관·쉼터 보장
  - \*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권역2, 지역2개), 재활의료센터(권역8, 지역1개), 권역재활병원(7개), 건강주치의 3차 시범사업(21.9), 장애친화산부인과(8~12개), 구강진료센터(16개)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4.  
강선우 의원안 등: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이종성 의원안 등: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 이상 설치·운영 의무화 등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누리집

[건강정책\\_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건복지부 누리집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 11. 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에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이 있음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각 사업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음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부진하고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부재함

-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은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인지도 부족, 장애인 본인부담금 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임
- 「장애인건강권법」은 2017년 12월 30일 시행 이후 약 4년이 되어가지만,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부족한 실효성으로 인해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적고 서비스가 미숙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있어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 정책연구용역 2020. 12.

고비용의 투자 대비 저수익으로 의료기관이 스스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친화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서비스 표준화를 목적으로 의료인력 및 시설 표준 정립 등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주산기(임신 초~출생 4주)동안 장애인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가강진료센터 설치 · 활성화 방안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연구용역 2017. 10.

중앙 및 권역별 장애인가강진료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해 센터의 설치 및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권역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함.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